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39호>

2003년 11월 3일(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2 대학 용인배움터 노리과 러시아예술제 개최	3 대학 	4 사회 서울배움터 대학원공간 문제와 용인배움터 식당 개선 점검	5 사회 이리크 종근기자 이진숙 기자에게 듣는다	6 문화
--	---------------------------------------	-----------------	--	---	-----------------

정이사 체제구성, 오는 10일 윤곽 드러날 듯

지난달 30일 재단관련 공판에서 결정돼

재판부, 재단관련 8인의견 10일에 청취키로

교육부를 상대로 설립자측이 제기한 관련이 사건임에도 소송 재판이 오는 10일(월)이 전환 절이 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목) 공판에서 재판부는 설립자측 1명, 교육부 1명, 총학생회장, 총동문회장, 총장, 노조위원장, 교협회장, 이사장 등 모두 8명을 모아 항후 재단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 과정에서 설립자 측 이사장은 배제하고 이사장을 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는 동의하지만 '제 정적 기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6차 항의방문 진행
지난 달 29일(수) 약 40여명의 용인배움터 학생들이 교육부에 아직 반체 협의 방문을 갖다. 부총학생회장 강경환(동양·중국어 88)군과 서양어대 학생회장 이세영(서양·영어 97)군이 교육부 관계자와 만남한 자리에서 이 관계자는 11월 내려와 외대 재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면 매일 교육부 앞 1인 시위에 대해 그만 해 달라고 조언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항후 재단구성에 있어 학내 구성원들이 합의한 대로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부총학생회장 강경환 군은 "학교 내 일부 세대에서 학생들의 힘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흥 일식 이사장이 학생들의 협의안에 동참할 수 있게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학내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5:3:1 방식이 합의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여기서 1은 설립자 측 추천이사가 들어오는 것인데 법적용 면에서 설립자 측을 배제하고 이사장을 구성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의견이다. 총학생회장 유복재(사회·신문방송 96)군은 "설립자 측을 위한 이사진의 자리를 마련해라. 이사진 전원이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로 구성하고 권

강경신 기자
shini18@hanmail.net



지난달 29일 외대인들은 재단 사유화에 반대, 여섯번째 교육부 항의방문을 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내일 모래가 주식이라고 달은 밤에 만일 이 다 되어 있는데 내가 85호가 크레인 위로 물려온 지 벌써 90개임.
조합원 동지들의 접면과업이 50일이 되었지만 회사 교실 원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조합에 합조적인 조합원의 회사를 말리려고 직장을 한 모양이다.

노동자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다. 그런 데도 본가분들과 써여빠진 정치들은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아무싱이다.

1년 달기 순이익의 15%, 25배를 주주들에게 배상하는 경영진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는 노무정책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바꿔내지 못하면 우리 노동자는 바탕 아래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슬퍼할 때마다 이 노동조합, 어느 조합인이 받아들이겠지.

그동안 부족한 나를 믿고 함께 해준 모든 동지들에게 고맙고 또 미안할 때들이 있다. 그렇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 40년의 인생이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것인 걸로 생각하는 하지 않느냐.

이 회사에 들어온 지만 2년, 그런데 한 달 기본급 165만원, 그다음 세금을 공제해 고내니 남은 것은 팔십 및 만원. 근데 넌 수가 많이갈수록 생활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며 할때마다 수백 또는 수천 원 더 조달되고 있다. 이런 힘으로 아파죽어도 이놈의 보이문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라가 망나니 노동자는 다 돌아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캐비디다면 어차

▶ 관련기사 4, 5면

양배움터 학생회장 선거 일정 확정돼

용인, 반전평화 축제

9일 전국노동자 대회

서울배움터 38대 총학생회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하며 19일과 20일 투표를 한다. 등록이마저는 16일과 17일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한다며 18일(금)과 19일(수) 투표를 한다.

시범대회와 상경대, 대법대는 아직 미정이다.

한편 용인배움터 25회 총학생회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은 19일(수)부터 9월(금) 양일간 진행된다. 후보자는 10월(화)부터 24일(월)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투표는 25일(화)과 26일(수) 양일간 진행되며 26일 6시 반에 개표를 한다.

사회에는 10일(월)과 11일(화)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을 하며 19일(수)과 20일(목) 투표를 한다. 시상대에는 8일(목)과 7일(금) 후보자 추

'11·3 반전평화 페스티벌'이 오는 3, 4일(화·수) 양 일간 '평화와, 친환경의 불가리'라는 주제로 용인배움터 노후극장에서 열린다. 1부는 MC stripe, 민중가수 이정철(아프리카 어 펄), 도깨비스룹, 디자우드 등 초청가수들의 공연과 양산군동연합체의 공연, FES9에서 준비한 반전 평화기원 축제로 구성돼 있고 2부에서는 반전평화 기원 축제의식이 진행된다. 또 4일(화) 늦은 5시 공대 탄단 분체 및 노동 3권 강화 △평화 반대·전쟁반대 △세계화 반대·WTO반대 등을 축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노동자의 분신자살과 관련, 손배가 입당률 노동탄압 중단을 집중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 대학생, 노동자 현실에 관심가져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반대를 외치며 분신사살 했지도 30년이 지났다. 14, 5세 소녀들이 쉬운 날 없이 하루 평균 1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도 일에 풀칠하기려면 시대였고 노조활동, 노동기준법은 그저 허울뿐인 그림자였다. 현실을 바꾸고자 노력했던 젊은이가 노동법장을 손에 들고 분신하게끔 만든 그런 시대였다.

▲제이미 지난 지금은 한때 노동자를 함께하는 인권보호회를 명성을 날리던 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세상이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자살하거나 분신한 노동자가 별로 많았다. 지난 1월 분신해 사망한 고 배달호씨를 시작으로 지난 10월 한진중공업 코레인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김주이 노조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서 분신한 근로복지공단 이문석 차장, 이들은 손에 거친 기업주의 부당함을 일리고 비정규직차별을 철폐하자는 이유에서 그들의 목숨을 놓았다.

▲대학생과 분신으로 그들의 현실을 알린다는 것은 절박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동과 폭력'이라는 말은 가담감은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인간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버리는 국권적 인 투쟁까지 벌여야 하는가? 그리고 점진빼며 총고회 일이 아니면 말이다. 다만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사회가 노동자들이 목숨을 버려버리 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취업을 앞둔 세대라 예비 노동자라는 불린다. 일련의 사태들을 '노동자들의 일이겠거나'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다.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딱질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탄압, 손배가족 등 우리한테도 적용될 어지는 엄마들도 있다. 노동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편집장



문화상 : 시(3편 이상), 소설, 수필, 회곡, 평론

학술상 :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

미감 : 12월 31일(수)

총상금 : 각 200만원

문의 : 서울) 02-961-4652

용인) 031-330-4112

메일 : oedaepress@hanmail.net

40회 외대 문학상

20회 외대 학술상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노조에 관한 오해들 Q&A

외면받는 노조, 실상은 ...

△파업, 나쁘게만 볼것인가?

"노조만 살고 기업은 바쁨"

2003년 7월자 매일 신문 1면의 현대자동차 파업에 관한 기사의 제목이다. 주요 언론에 의하면 지난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82%는 "분단간 파업 자체에 아련하다"고 했으며, "파업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애�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임금결정과 동시에 교육, 파업의 권리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정치 경쟁과 더불어 노동자의 성장권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법으로 금지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경쟁하고 등에 반발, 파업 시에는 모두 불법파업으로 간주되고, 이에 노동자는 "구속", "폐기기류"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회사측이

협상 태세에 나오자 않아서 '교섭' 권리가 거치지 못한 파업도 '불법' 파업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폐기기류"의 공식을 떠올리면서 파업기금 내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노동자와 이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파업에 대한 다른 나라의 반응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프랑스는 1996년 11월, 트럭 노동조

합에서 파업을 삶다'는 프랑스의 국경을 막는 일이 벌어졌다. 트럭 버리게트는 주변도로를 온통 막았고 프랑스 트럭을 물론 프랑스 내 다른 국적의 트럭들도 충격을 수 없었다. 또한 유통 유통 교통의 중심지인 프랑스의 바이이는 곧 유럽 유통 교통의 바이를 뜯쳤다. 그러나 이렇게 격렬한 파업에도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59%가 지지, 동의했고 정부는 합의로 경찰을 동원할 수 없었다. 한때의 불편함으로 파업에 반대한다는 그 반대의 목소리가 후에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회적 압박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

문제는 노시간의 같은들은 '파업' 보다는 '대회'로 풀어야하는 것이 옳지만, '파업'은 노동자

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대기업노조 일종의 이익집단에 불과하다?

지난 8월 언론에서는 '근로자 평균 연봉 5천만원', '현대 자동차 노동자, 연봉 10억 이상 놀라운 수'를 받는 노동자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연재되었는데, 노동자연봉을 받는 노동자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연재되었는데, 노동자연봉을 받는 노동자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연재되었는데,

서 '협력업체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두 배, 세 배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문체 최근 노동운동을 밟고 나가고 있다'고 노동운동을 비난하는 논란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 노조가 실제로 '귀족'처럼 자신의 이익을 행하기에 급급한 걸까?

이에 대해 박경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주노총은 언제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지만, 임금 인상"을 요구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대기업 노조가 노동자 자신이 일을 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환경 조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이 포함 포스코를 방문해 현지 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

△강성 노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안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로 외국인 최고 경영자들이 당혹스러워하며 이에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외국기업의 국내 철수 이유가 과연 강성 노조 때문일까?

외국 기업의 주된 철수 이유는 한국상황을 대대로 이해하지 못한 바이로 경영 실패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외국 기업 노시간의 같은들은 '파업' 보다는 '대회'로 풀어야하는 것이 옳지만, '파업'은 노동자

의 요구를 주장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펴지고 있는 '외자유치 만능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박경우 정책국장은 "네 책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높여 나가면 국내 경제의 공문화 현상이 일어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투자자본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 자본의 철수는 미국 국가 경제의 커다란 위기 상황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논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문제 해결의 만능인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장 유연화란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고용, 쉽게 해고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현재 경직되어 있는가?

울산 10월 30일자 (포브스)는 "한국의 노동 시장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미국, 캐나다에 이어 3위"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박경우 정책국장은 "실업문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고 말한다. 위의 논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원수록 실업률이 떨어져야 하는데 현

1993년부터 11년간 BAT 코리아를 경영한 존 테리며 전 시장은 최근 이집트에서 회사의 성장을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준 한국직원들 덕분이었다"며 "평소 회사가 노력한다 면 성장스토리가 왜 생겼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영한 경영 노력이 있었으면 강성 노조가 양성되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이는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한국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경쟁을 통한 순位를 찾는 것을 노조 때문이다. 말하자면 '말하는'은 따끔한 충고를 덧붙였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펴지고 있는 '외자유치 만능론'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박경우 정책국장은 "네 책에서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높여 나가면 국내 경제의 공문화 현상이 일어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은 국내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투자자본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 자본의 철수는 미국 국가 경제의 커다란 위기 상황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논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디어비평 - 미디어오늘 이수경 기자

보수언론 해도 너무한다!



"회사에 들어온 지만 2년, 그런데 한달 기본급 105만원. 그 중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8만 7천원... 엔수가 더할수록 더러워 쪼들리고 알아야 한다"며 한편에 이들의 보수언론들은 입만 열면 노동조합 때문에 나리가 망한그니 난리니 노동자는 다 들어죽어야 한다 말인가(김주아) 험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정우석 유서 일부'

1월9일 배달호 두산중공업 노조와 본신 자살, 10월17일 김주기 위원장 사망, 10월24일 이남우 노동위원장과 노조위원장 본신 기도... 10월26일 이강석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부정 분신(31일 사망)... 이들을 자살이라는 극한 선택에 내몬 것은 무엇인가. 우선 '불법' 정부에 대한 기록한 손배상 청구와 기업유조 조치,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양성과 차별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사용자측의 비정규직 노동자 단란화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이른바 보수언론에게 적어도 '자살 방조'의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로 '손해배상 기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한진중공업은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노조원 113명에게 18억 6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김주기 위원장의 경우 집값 매입금과 금연비 730만원을 기록당첨했다. 김 위원장의 손해액은 월 104만원 밖에 되지 않았던 배달호씨, 이해남씨도 손해 기록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

그런데 이같은 손해 기업유조의 '분명하고 엄명한' 집행을 강조해 미지 않은 게 바로 이론 바 보수언론뿐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발전노조 파업 종료 직후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원칙을 고수한 진리가 주효했다'고 평가했고 이에 앞서 90년 저하노조 파업 당시에는 '(본부는) 국민에게 공포한 파업 손해배상 등을 분명하게 청구해야 한다'(4월 29일자 조선일보장 칼럼)고 주문했다.

66

'이른바 보수언론'에게 적어도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

99

올해 초 배달호씨가 분신하여 조선일보는 (두산 사태, 원칙과 순리로 풀어야)(1월21일자 사설) '손해 상대 소송 합리적으로 풀어야(1월25일자 사설) 등을 삼아 손해 기업유조에 기록한 점이 있는 드로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도 잠시, 두산중공업 사태 타결 이후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원 개인별 손해배상 소송과 기업유조를 모두 해제해 주기로 한 부분도 문제'(3월 13일자 사설)고 주장하며 이내 '기자 소신'을 되찾았다.

동일일보는 지난 4월 발전노조 파업 종료 직후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을 제기하고 원칙을 고수한 진리가 주효했다'고 평가했고 이에 앞서 90년 저하노조 파업 당시에는 '(본부는) 국민에게 공포한 파업 손해배상 등을 분명하게 청구해야 한다'(4월 29일자 조선일보장 칼럼)고 주문했다.

동일일보는 지난 3월 13일자 (3월 13일자 사설) '절도 노사... 기업유조 및 손해배상을 청취하라'로 힘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한 대응 원칙이 무너진 것'(4월 21일자 사설) '불법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에 대해 노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정부에 부임된 법적 자구수단으로 정부가 감수할 일이 아니다'(7월 3일자 사설) 등을. 그러나 10월 노동자들의 자살 시도가 이어지자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가... 조합비와 임금을 기업유하는 것은 정당한 자구수단...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불법화하게 하니 노조원의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이르렀다는 것은 안 된다'(10월 28일자 사설)고 한다. 이 글의 제목은 '(국한 투쟁밖에 길이 없나)이다. 그러나 한 점 '인간관'은 넘나들고 해야 할다. '행복하고 어르' 방식이라고 해야겠다.

이상은 이른바 보수언론이 출아낸 무수한 '노동자 때리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이른바 보수언론은 출범 3월째 동안 130명의 노동자를 구속(민주노총 집계)한 노무현 정부를 '정노 정부'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대기업 노동자 임금 부풀리기와 외국 기업 철수 과정으로 오로는 눈賺까지 넣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외연한 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소리 높여 주장했다. 노동자 분신 소식과 경찰은 축소 또는 생활편면서 경찰과의 충돌 사실은 부끄러워했다.

한 시민단체의 자작대로 "온갖 노동자들의 파업 원인과 사유의 부당노동행위를 제대로 보도하기만 했더라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적 악자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대신에 일방적으로 무를 끌어려는 언론은 '보수언론'이 아니다. 이러한 언론들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유지하는 한, 제2의 배달호, 제3의 김주아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로크 전투별 파병 저지를 위한 전대기원 공동광고

파병... 하시렵니까?



얼마전 실시한 전국 대학생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분없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동조하고 싶지 않아서'가 67.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분없는 전쟁 놀음에 진짜로 '한 몸' 하시렵니까?

파병·전쟁반대, 이제 전 세계인의 바탕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